

ESG 소식

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첫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제출
EU 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
홍콩, 2024년 상장기업 대상 기후 공시 의무 시행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법적 기반 보완,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2022.3월, 국내 ESG 채권발행 잔액 200조 원 돌파
ISSB, 산업계 의견 반영, 기후 외 지속가능성 공시 1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판결, 산업계 긴장감 고조
97개 투자자 NZEI 결성, 기업에 넷제로 전환계획 제출 촉구

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첫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제출

- ◎ 환경부는 2022년 3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제출함. 금번 보고서는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에 근거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함에 따른 것임.
- ◎ 현재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기후변화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영국, 호주 등 50개 국가에 이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제출하는 첫 번째 보고서임.

EU 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

- ◎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수입품에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4월 18일 처리함.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역외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
- ◎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의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량 추정치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임. '탄소 국경세'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책정됨.
- ◎ CBAM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역 장벽'이 생기는 효과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은 43억 달러에 달함.

홍콩, 2024년 쏘 상장기업 대상 기후 공시 의무 시행

- ◎ 홍콩증권거래소가 쏘 상장기업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표준에 맞춰 기후 공시 제공 의무화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부터 적용할 계획을 발표함.
- ◎ 금번 공개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스코프3 배출량 또는 통제 밖에 있는 가치사슬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에 대한 보고서와 기후 탄력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많은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법적 기반 보완,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 ◎ 정부는 「기후변화적응법」을 제정해 지난달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문별 감축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 ◎ 특히, 금번 법적 기반 강화 내용으로는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현행 계획에는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돼 있으나 에너지 소비량 평가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보완되었고,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추진할 예정임.

2022년 3월, 국내 ESG 채권발행 잔액 200조 원 돌파

- ◎ 2022년, ESG 채권발행액은 전반적인 채권발행 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2021년 대비 약 32% 감소했으나, 발행 잔액은 2021년 대비 24% 증가함. 특히, 녹색채권 발행 잔액은 35% 증가함.
- ◎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ESG 채권발행 잔액은 199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임.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안정화 및 녹색프로젝트 투자의 확대에 따라 2023년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ISSB, 산업계 의견 반영, 기후 외 지속가능성 공시 1년 유예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4월 4일, 기후 관련 정보 외에 다른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도입 시점을 1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힘. ISSB는 미국의 미국 증권위원회(SEC), EU와 함께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 기관임.
- ◎ 본래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과 S2(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모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입 첫 해에는 S1과 S2에서 기후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그 외에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는 그다음 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판결, 산업계 긴장감 고조

- ◎ 2023년 4월 6일,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2호 판결이 나왔음. 1호, 2호 판결 모두 대표 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 ◎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14건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임.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됨.

97개 투자자 NZEI 결성, 기업에 넷제로 전환계획 제출 촉구

- ◎ IIGCC(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 그룹)이 2023년 3월 27일, 97곳의 투자자와 손잡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넷제로 활동 참여 이니셔티브(NZEI·Net Zero Engagement Initiative)'를 출범하였음.
- ◎ NZEI는 출범과 동시에 투자대상인 글로벌 기업 107개 곳에 △ 포괄적 넷제로 약속 권유, △ 조율된 녹색 가스 배출 목표, △ 탄소배출 성과 추적 방법, △ 믿을 만한 탈탄소화 전략을 포함한 '넷제로 전환 계획'의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투자자 서한'을 발송함.